

12-08 (통권 제 479호)

2012. 3. 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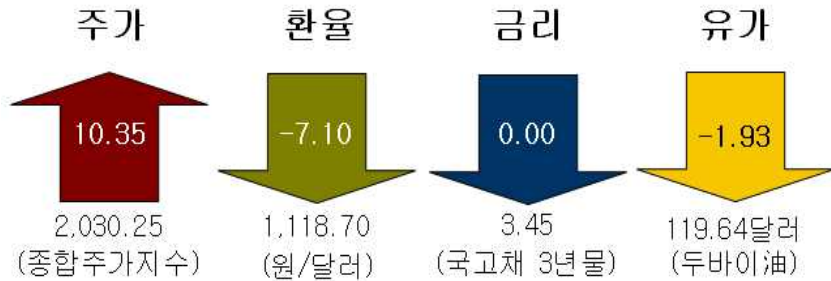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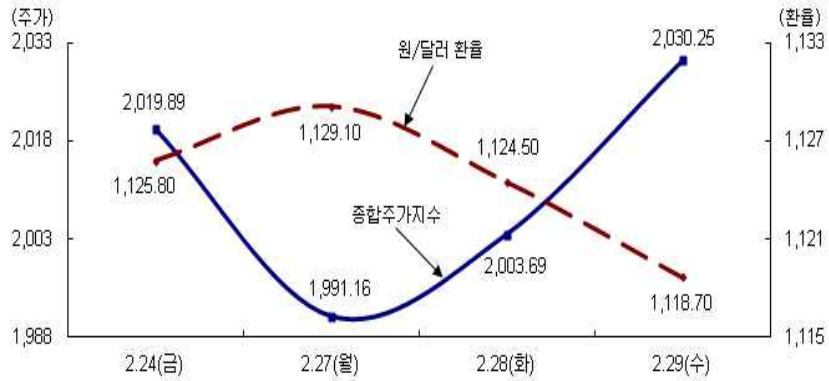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반도 평화지수, 2012년 1/4분기 큰 폭 하락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24~3.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반도 평화지수, 2012년 1/4분기 큰 폭 하락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용 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홍 순 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반도 평화지수, 2012년 1/4분기 큰 폭 하락

1.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개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현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문제의 조기 매듭짓기와 비정치·군사부문의 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을, 차기 정부는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가 72명과 일반국민 1,002명에 대한 설문조사(1. 31~2. 10) 결과,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의 김정은 체제는 경제난 해결을 통한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장 시급한 해결 사안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회복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을 꼽았다. 다만 대북 신뢰도, 남북관계 및 통일에의 영향 등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정치 성향 등에 따라 시각차를 보였다.

한편, 전문가의 대부분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하면서, 응답자 모두가 차기 정부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차기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파트너로서의 인정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정경분리 원칙 등으로 남북 상호신뢰 회복 노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 전향적 대북정책이 필요함에는 공감하나, 대북 신뢰도와 김정은 체제 출범의 남북관계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들 간의 견해차 존재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현 수준 유지'나 '점차 확대'할 것이란 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모든 국민들이 민심 동요 예방과 경제난 해결 등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은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75.0%)와 다수의 일반인(51.6%)은 북한의 사과 없이도 정부는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작

금의 전환기를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북 신뢰도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상당수(69.4%)는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성향에 따라 보수성향은 신뢰할 수 없다(65.2%), 진보성향은 신뢰할 수 있다(69.6%)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정은 체제 출범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상당수(72.2%)는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의 60.8%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해 서로간의 시각차가 존재했다. 아울러 2012년 남북관계 전망은 전문가(69.4%)와 일반인(66.7%) 모두 현 수준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체제의 대외관계) 대외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경제는 작년과 비슷

김정은 체제의 대외관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북미(51.4%) 및 북중(68.1%) 관계는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응답하여, 김정은 체제의 대외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북한경제는 작년과 비슷할 것(70.8%)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주변국 평가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높은 비율로 미국은 도움을 줄 국가로 응답했고, 중국은 방해할 국가로 응답했다. 중국을 통일 방해 나라로 응답한 것은 최근의 북중 경제 밀착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 등으로 양측간 정치·경제 관계가 밀착될수록 남한의 지렛대 역할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정책 평가와 과제)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속에, 비정치·군사 부문의 협력을 통한 남북 상호 신뢰 회복 노력이 시급함

전문가의 대부분은(79.2%)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 대해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지나친 원칙 강조로 인한 남북경색 지속(78.9%)을 가장 잘못된 점으로 지적했다. 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81.9%)와 '이산가족 상봉'(81.9%), '남북경협 회복'(77.8%), '천안함·연평도 문제의 매듭짓기'(65.7%),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63.4%)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42.3%)와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29.3%)에 대해서는 비교적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전면 재검토(58.3%) 혹은 수정·보완(41.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2012년 1/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2011년 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하락세로 반전하여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25p, 10.3p 하락하였다. 이는 천안함·연평도 문제 미해결의 장기화와 6자회담 재개 지연, 김 위원장 사망 후의 남북관계 긴장 고조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지수는 36.5를 기록하여 '긴장 고조' 상태가 심화되었으며, 기대지수 또한 대폭 하락하여 2012년 1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예상된다.

(주요 특징) 2011년 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객관적 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주관적 지수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는 대폭 하락하였다.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 지수 및 경제·사회문화·인도적 지원 분야의 남북교류 지수 등의 객관적 실적 자료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38.0에서 41.1로 3.1p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인식과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가 평가지수는 40.0에서 31.9로 8.1p 하락하여 연평도 도발 직후 수준으로 긴장이 고조되었다. 또한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도 51.0에서 40.7로 대폭 하락하여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남한의 조문 제한 등으로 북한이 반발하여, 국방위원회의 대남 성명과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현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대남 강경 발언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항목별로는 전문가평가지수가 '협력·대립의 공존상태'의 진입 단계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대폭 하락하였지만,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정량분석지수 중 이벤트지수는 남북 베이징 비핵화 실무회담, 2차 북미 회담 개최, 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계기로 상승하였으나, 연평도 도발 1주기 호국훈련 등으로 상승 폭은 47.5에서 51.4로 3.9p로 제한적이었다. 교류지수 역시 남북 개성 만월대 발굴 작업 재개 및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의 대북 밀가루 지원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한 민간의 남북교역 감소로 28.5에서 30.8로 2.3p 상승에 그쳤다.

셋째, 성향별 평가에 있어서는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중도 및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는 모두 보수 성향의 지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유연성을 강조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취임(9. 19)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을 뿐 아니라,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정부의 조문 제한과 북한의 반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지난해 4분기의 평가지수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전망)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현 수준'과 '점차 확대' 전망에 높은 비율로 응답

- 이는 심각한 경제난이 민심 동요 등의 체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보수성향의 전문가들(56.5%)과 일반인들(43.0%)은 '현재 수준 유지'를, 진보성향의 전문가들(69.6%)과 일반인들(47.7%)은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전문가				일반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점차 확대할 것이다	56.9%	39.1%	61.5%	69.6%	39.2%	34.7%	36.7%	47.7%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40.3%	56.5%	34.6%	30.4%	41.1%	43.0%	44.6%	34.9%
오히려 축소할 것이다	2.8%	4.3%	3.8%	0.0%	19.8%	22.4%	18.7%	17.4%

○ (대북 신뢰도) 전문가들은 정치성향별로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인 반면, 일반인들은 상당수는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

- 전문가들의 응답률은 '신뢰할 수 있다'(37.5%)와 '신뢰할 수 없다'(40.3%)가 큰 차이 없는 반면, 일반인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을 대화 파트너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69.4%)이 높음
- 전문가의 경우에는 정치성향별로 응답률이 달랐는데, 보수성향(65.2%)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한 데 반해, 진보성향(69.6%)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음
- 반면에 일반인의 경우는 성향 구분 없이 상당수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여전히 천안함·연평도 사건, 남한의 회담 제안 거부 등이 응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북한에 대한 신뢰도	전문가				일반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신뢰할 수 있다	37.5%	8.7%	34.6%	69.6%	19.9%	11.3%	21.2%	29.9%
신뢰할 수 없다	40.3%	65.2%	38.5%	17.4%	69.4%	80.4%	63.1%	61.1%
잘 모르겠다	22.2%	26.1%	26.9%	13.0%	10.8%	8.3%	15.7%	9.1%

○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 전문가의 상당수와 일반인의 과반수는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북한에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

- 전문가의 75.0%와 일반인의 51.6%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정부는 북한의 새지도부와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

· 이는 전향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작금의 전환기를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의 기회(opportunity)로 활용하자는 의미로 해석

· 성향별로는 일반인의 보수성향(55.9%)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더라도 전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	전문가				일반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사과 없이 대화해서는 안 된다	25.0%	47.8%	11.5%	17.4%	45.0%	55.9%	43.5%	31.9%
사과 없어도 전향적으로 관계 개선	75.0%	52.2%	88.5%	82.6%	51.6%	41.8%	51.0%	65.4%

○ (김정은 체제의 남북관계 영향) 김정은 체제 출범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와 일반인들 간의 시각차가 존재

- 전문가의 72.2%는 김정은 체제 등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상당수의 일반인들(60.8%)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

· 전문가들은 성향 구분없이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전문가				일반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도움이 될 것이다	72.2%	65.2%	76.9%	73.9%	39.2%	31.3%	38.2%	51.0%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7.8%	34.8%	23.1%	26.1%	60.8%	68.7%	61.8%	49.0%

○ (2012년 남북 관계 전망) 2012년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높음

- 상당수의 전문가(69.4%)와 일반인(66.7%)은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더라도 당분간 남북 관계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
 - 이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남한의 조문 제한 등으로 남북 관계가 여전히 경색돼 있으며, 특히 현 정부와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발언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김정은 체제와 남북 관계 전망	전문가				일반인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좋아질 것이다	19.4%	21.7%	15.4%	21.7%	23.3%	20.8%	21.3%	28.6%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69.4%	65.2%	76.9%	65.2%	66.7%	70.1%	66.9%	62.0%
나빠질 것이다	11.1%	13.0%	7.7%	13.0%	10.0%	9.1%	11.8%	9.5%

○ (한반도 주변국들의 통일 영향)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통일에 도움을 줄 나라는 미국으로, 방해할 것 같은 나라는 중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통일에 가장 도움을 줄 나라로는 전문가의 68.1%와 일반인의 48.5%가 미국이라고 응답했고, 방해할 나라는 전문가의 69.0%와 일반인의 67.6%가 중국이라고 응답
 - 중국이 통일 방해 나라로 응답한 것은 최근의 북중 경제 밀착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등으로 양측 간의 정치·경제 관계가 밀착될수록 남한의 대북 지렛대 역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으로 평가됨

주변국 평가		전문가	일반인
통일에 가장 도움을 줄 나라	미국	68.1%	48.5%
	중국	18.8%	29.2%
	일본	1.4%	4.0%
	러시아	11.6%	3.1%
통일에 가장 방해할 나라	미국	11.3%	16.4%
	중국	69.0%	67.6%
	일본	19.7%	11.6%
	러시아	0.0%	4.4%

○ (김정은 체제의 대외관계) 북미·북중 관계 모두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응답

- 전문가의 상당수가 북미관계(51.4%), 북중관계(68.1%) 모두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응답하여, 김정은 체제의 대외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전망이다
- 북중관계는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북미관계는 진보성향의 전문가들만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65.2%)이 높았음

북한의 대외관계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북미 관계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다	51.4%	43.5%	46.2%	65.2%
	현재 수준일 것이다	48.6%	56.5%	53.8%	34.8%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다	0.0%	0.0%	0.0%	0.0%
북중 관계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다	68.1%	73.9%	69.2%	60.9%
	현재 수준일 것이다	30.6%	26.1%	30.8%	34.8%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다	1.4%	0.0%	0.0%	4.3%

○ (2012년 북한 경제 전망)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2012년의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해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2011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

- 전문가들의 70.8%가 2012년 북한 경제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해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음
- 이를 반영하듯 북한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의 구호를 줄이고 강성국가(10회), 강성부흥(11회)이란 구호로 하향조정하였음
- 다만, 악화보다는 개선될 것이란 응답 비율이 다소 많았음

2012년 김정은 체제의 북한경제 전망	종합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다	18.1%
작년과 비슷할 것이다	70.8%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11.1%

○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상당수가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정부의 지나친 원칙 강조로 인한 남북경색을 실정(失政)으로 지적

- 전문가의 79.2%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못한다는 평가로 응답했고, 지난 3분기와 비교해도 잘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73.8% → 79.2%)
- 보수성향(52.2%)은 '잘하는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중도 및 진보성향은 절대다수가 '잘못한다'고 하여 정치성향별 차이가 분명함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2011.11	2012.2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아주 잘 한다	1.2%	0.0%	0.0%	0.0%	0.0%
잘하는 편이다	25.0%	20.8%	52.2%	3.8%	8.7%
잘못하는 편이다	35.0%	41.7%	34.8%	61.5%	26.1%
아주 잘 못한다	38.8%	37.5%	13.0%	34.6%	65.2%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했다'고 응답한 전문가(20.8%)에 한해 질문한 결과, 잘한 점은 대다수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응답(80.0%)
- 다음으로 '통일세 신설 추진 등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13.3%)를 성과로 지적함
- 그러나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무함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잘한 점	종합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80.0%
통일세 신설 추진 등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13.3%
한미동맹 강화	0.0%
북한인권 및 탈북자 지원 대책 강화	0.0%
남북관계 비전 제시	0.0%
기타	6.7%

-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못했다'고 응답자(79.2%)에 한해 질문한 결과, 대다수가 '원칙강조로 인한 남북경색 지속'(78.9%)이라 응답했고, 다음으로 '주변국과 공조 미흡 및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8.8%)의 순이었음
- 기타 의견으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현실성 없는 북한 붕괴 추구로 남북간 불신 심화, 분명한 원칙 미 고수 등이 있었음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잘못된 점	종합
원칙강조로 인한 남북경색 지속	78.9%
주변국과의 공조 미흡과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	8.8%
통일세 제안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부담	0.0%
북한인권 실질적 개선 미흡	0.0%
보수와 진보간의 여론 결집 미흡으로 남남갈등 심화	7.0%
기타	5.3%

- (현 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사안)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회복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비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을 우선 과제로 제시

현 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사안	시급하다	시급하지 않다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식량, 의약품 등)	81.9%	18.1%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81.9%	18.1%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중단된 남북경협 회복	77.8%	22.2%
천안함·연평도 문제 매듭 짓기	65.7%	34.3%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2단계 사업)	63.4%	36.6%
주변 강대국들과의 공조 하에 북한 비핵화	63.4%	36.6%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	62.5%	37.5%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및 대북 투자 활성화	42.3%	57.7%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	42.3%	57.7%
남북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 개최 추진	29.6%	70.4%

- (정치·외교 분야) 현 정부 임기 내에 우선 해결 과제로 국내적으로는 ‘천안함·연평도 문제 매듭짓기’(65.7%)를,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과의 공조 하에 북한 비핵화’(63.4%)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
 -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응답률(29.6%)이 낮게 나타난 것은 최근의 남북 간 긴장 고조 움직임으로 전문가들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
 - 한편 ‘주변 강대국과의 공조 하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 대다수의 보수성향(82.6%)은 ‘시급하다’로 응답한 반면, 과반수의 진보성향(54.5%)은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성향별로 시각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현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과제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정치 외교 분야	천안함·연평도 문제 매듭짓기	시급하다	65.7%	69.6%	60.0%	68.2%
		시급하지 않다	34.3%	30.4%	40.0%	31.8%
	주변국과의 공조 하에 북한 비핵화	시급하다	63.4%	82.6%	61.5%	45.5%
		시급하지 않다	36.6%	17.4%	38.5%	54.5%
	남북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 추진	시급하다	29.6%	21.7%	26.9%	40.9%
		시급하지 않다	70.4%	78.3%	73.1%	59.1%

- (사회·문화 분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이산가족상봉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비율로 시급하다고 응답
 - 다만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시급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떨어짐

현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과제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사회 문화 분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식량,의약품 등)	시급하다	81.9%	60.9%	88.5%	95.7%
		시급하지 않다	18.1%	39.1%	11.5%	4.3%
	이산가족상봉 문제해결	시급하다	81.9%	69.6%	84.6%	91.3%
		시급하지 않다	18.1%	30.4%	15.4%	8.7%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	시급하다	42.3%	65.2%	30.8%	31.8%
		시급하지 않다	57.7%	34.8%	69.2%	68.2%

- (경제 분야)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중단된 남북경협 회복'(77.8%)과 개성공단 활성화(63.4%), 금강산·개성관광 재개(62.5%)가 시급하다고 응답
 - '금강산, 개성 관광의 재개'가 시급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종합적(62.5%)으로 는 높지만, 성향별로는 보수성향 다수(69.6%)가 시급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중도·진보성향과 차이를 보임

현정부 임기 내 시급한 해결 과제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경제 분야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중단된 남북경협 회복	시급하다	77.8%	60.9%	84.6%	87.0%
		시급하지 않다	22.2%	39.1%	15.4%	13.0%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2단계 사업)	시급하다	63.4%	56.5%	65.4%	68.2%
		시급하지 않다	36.6%	43.5%	34.6%	31.8%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	시급하다	62.5%	30.4%	73.1%	82.6%
		시급하지 않다	37.5%	69.6%	26.9%	17.4%
	북한 지하자원 개발 및 대북투자 활성화	시급하다	42.3%	30.4%	46.2%	50.0%
		시급하지 않다	57.7%	69.6%	53.8%	50.0%

○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모든 전문가들이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응답

-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58.3%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 성향마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무함
 - 성향별로는 진보(87.0%)와 중도(61.5%)의 경우는 '전면 재검토'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보수성향의 전문가마저도 상당수(73.9%)가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응답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전면 재검토	58.3%	26.1%	61.5%	87.0%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정, 보완	41.7%	73.9%	38.5%	13.0%
현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	0.0%	0.0%	0.0%	0.0%

○ (차기정부의 역점 분야)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과 균형외교 강화,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남북경협 활성화 등을 가장 역점 분야 할 과제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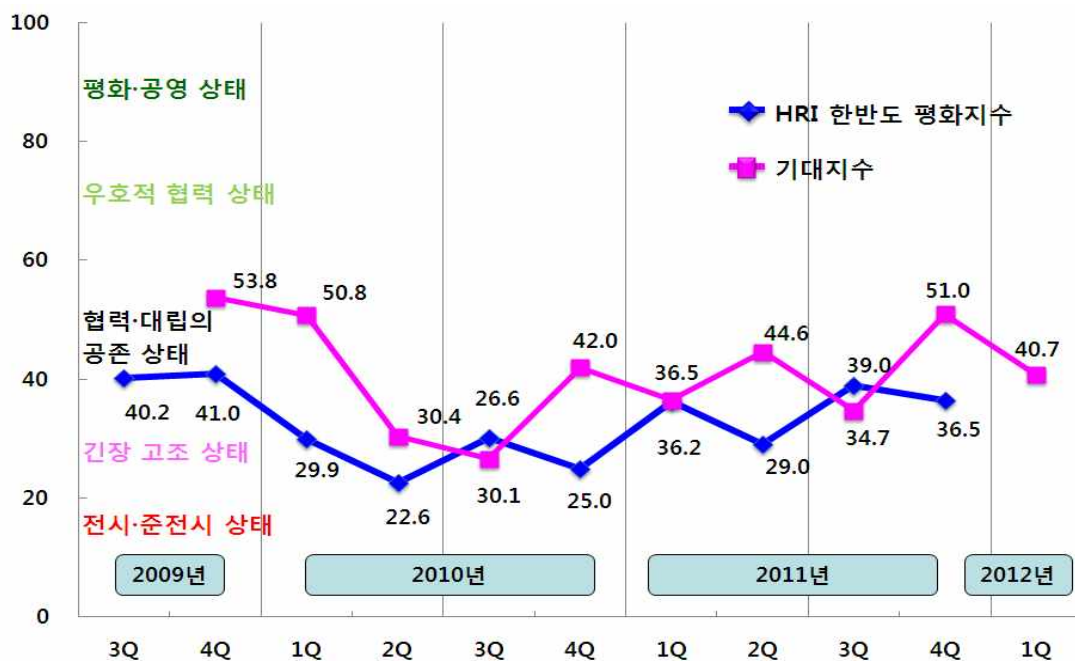
- 전문가의 34.7%는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중 파트너 인정과 인도적 지원 확대 등으로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 노력을 가장 중요한 역점 분야라고 응답
- 다음으로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와 '주변국과의 균형외교 강화로 한반도 안정적 관리'가 각각 19.4%로 중요하다고 응답
- 성향별로는 보수성향이 주변국과의 균형외교 강화에 높은 응답률(34.8%)을 보였지만, 중도와 진보성향은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 노력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분야	전문가			
	종합	보수	중도	진보
파트너 인정과 인도적 지원 확대 등으로 남북 상호신뢰 회복 노력	34.7%	21.7%	34.6%	47.8%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19.4%	13.0%	23.1%	21.7%
주변국과의 균형외교 강화로 한반도 안정적 관리	19.4%	34.8%	15.4%	8.7%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 (군사적 긴장 완화)	9.7%	0.0%	11.5%	17.4%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 통일재원 확충	6.9%	13.0%	3.8%	4.3%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	5.6%	8.7%	7.7%	0.0%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인권 개선 등	4.2%	8.7%	3.8%	0.0%

2. 2012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 (종합 평가) 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천안함·연평도 문제의 미해결 장기화와 김 위원장 사망 후의 남북관계 긴장 고조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여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2.5p, 10.3p 하락
- 2011년 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하락세로 반전하여 36.5를 기록함으로써, 3분기에 완화되었던 남북 간 '긴장 고조' 상태가 재차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3분기 39.0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2.5p 하락한 36.5를 나타냄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도 지난 분기 상승세에서 10.3p 대폭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의 2012년 1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40.7로 나타나, 2011년 4분기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서 '긴장 고조' 상태에 근접

< 2009~2011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 (특징 분석) 실적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대폭 하락
 -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31.9로 3분기 40.0에서 8.1p 대폭 하락 반전하였으나, 정량분석지수는 41.1을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3.1p 소폭 상승
 - 전문가 평가지수의 큰 폭 하락은 천안함·연평도 문제 미해결 여파의 장기화와 6자회담 재개 불투명, 연평도 사건 1주기 훈련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도 지난 분기에 비해 대폭 하락하여 남북관계 불안을 예고
 - 이는 북미·북일 접촉 속에서도 북한이 정부의 김 위원장 조문 불허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현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 격차는 여전하여,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실제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은 여전함
 -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간의 격차(| 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는 9.2로, 지난 분기 2.0에 비해 격차가 크게 확대
 - 특히 전문가 평가지수가 전분기의 40.0에서 31.9로 8.1p 큰 폭으로 하락한 데 기인

< 2009~2011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교류지수		
'11-4분기	36.5 (▽2.5)	31.9 (▽8.1)	41.1 (▲3.1)	51.4 (▲3.9)	30.8 (▲2.3)	40.7 (▽10.3)
'11-3분기	39.0 (▲10.0)	40.0 (▲18.2)	38.0 (▲1.9)	47.5 (▲2.3)	28.5 (▲1.6)	51.0 (▲16.3)
'11-2분기	29.0 (▽7.2)	21.8 (▽9.3)	36.1 (▽5.2)	45.2 (▽2.8)	26.9 (▽7.7)	34.7 (▽9.9)
'11-1분기	36.2 (▲11.2)	31.1 (▲15.6)	41.3 (▲6.8)	48.0 (▲15.2)	34.6 (▽1.6)	44.6 (▲8.1)
'10-4분기	25.0 (▽5.1)	15.5 (▽14.9)	34.5 (▲4.7)	32.8 (▽2.1)	36.2 (▲11.6)	36.5 (▽5.5)
'10-3분기	30.1 (▲7.5)	30.4 (▲19.5)	29.8 (▽4.6)	34.9 (▲1.6)	24.6 (▽10.8)	42.0 (▲15.4)
'10-2분기	22.6 (▽7.3)	10.9 (▽5.6)	34.4 (▽8.9)	33.3 (▽9.5)	35.4 (▽8.4)	26.6 (▽3.8)
'10-1분기	29.9 (▽11.1)	16.5 (▽17.0)	43.3 (▽5.2)	42.8 (▽6.5)	43.8 (▽3.9)	30.4 (▽20.4)
'09-4분기	41.0	33.5	48.5	49.3	47.7	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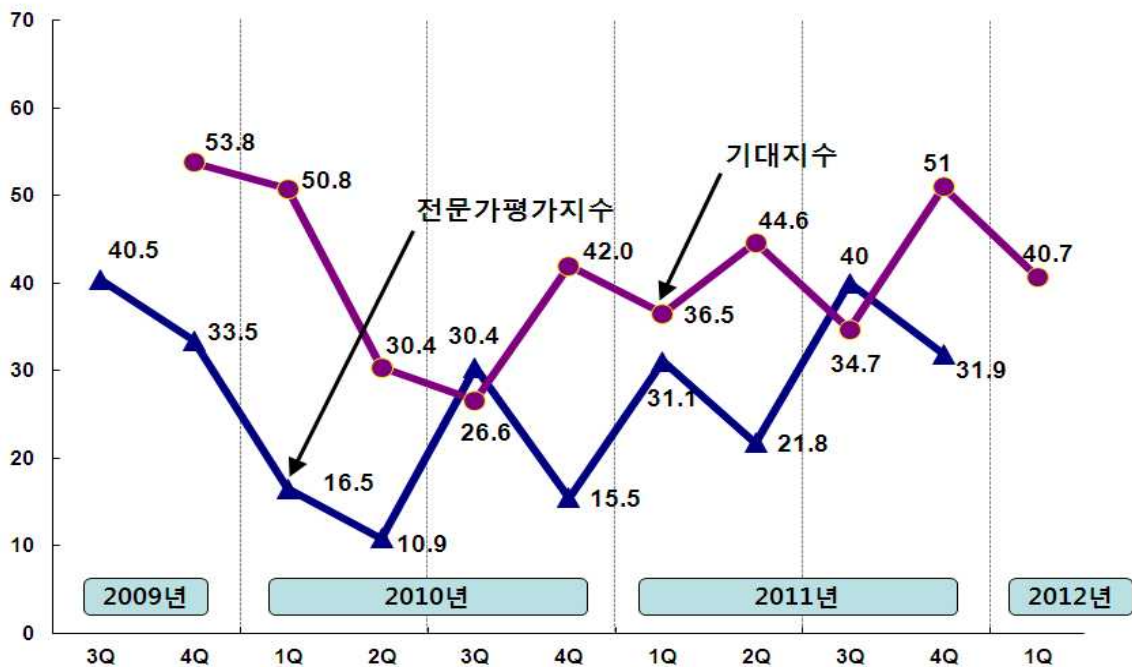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 (항목별 평가) 전문가평가지수는 '협력·대립의 공존상태'의 진입단계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하락,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상승

(1) 전문가평가지수 (2011년 3분기 : 40.0 → 2011년 4분기 : 31.9)

- 총 72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의 진입 수준에서 '긴장 고조' 상태로 다시 악화
-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8.1p 하락한 31.9를 기록하면서, 연평도 도발 직후 수준으로 긴장이 다시 고조됨을 알 수 있음
- 이는 남한의 연평도 도발 1주기 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 및 6자회담 재개 불투명 등으로 인해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12년 1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0.3p 하락한 40.7을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의 2012년 1분기의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은 지난 분기에 비해 대폭 하락
- 이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남한의 조문 제한 등으로 북한이 국방위원회의 대남 성명 및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현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대남 강경 발언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2009~2011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2) 정량분석지수 (2011년 3분기 : 38.0 → 2011년 4분기 : 41.1)

- 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8.0보다 3.1p 상승한 41.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 상승은 정치·군사 부문의 '이벤트 지수'와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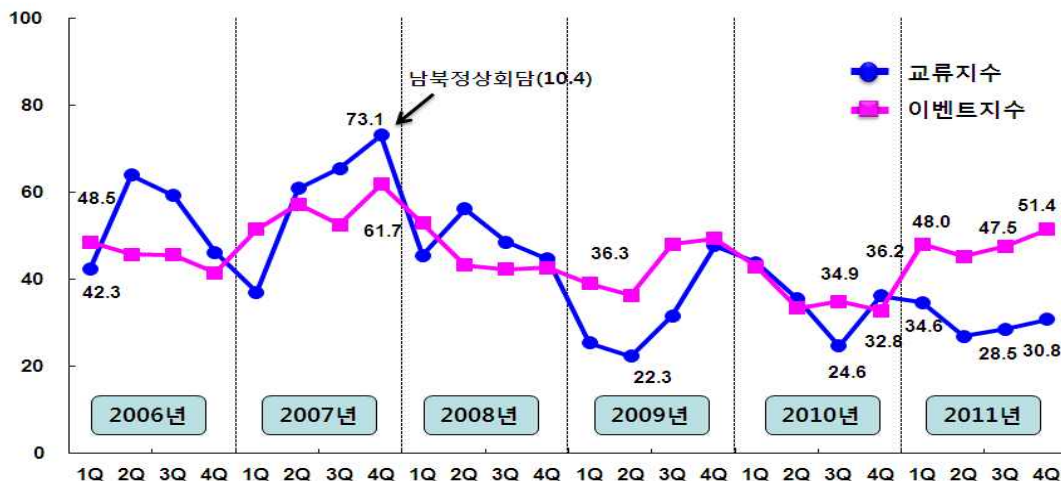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1년 3분기 : 47.5 → 2011년 4분기 : 51.4)

- 이벤트지수는 남북 베이징 비핵화 실무회담, 2차 북미 회담 개최, WHO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계기로 3.9p 상승하였음
- 하지만 금강산 재산권 외교적 조치 및 연평도 도발 1주년 관련 호국훈련에 상응한 북측의 위협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남

② 교류지수 (2011년 3분기 : 28.5 → 2011년 4분기 : 30.8)

-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2.3p 소폭 상승한 30.8을 기록
- 교류지수의 소폭 상승은 개성 만월대 발굴 작업 재개 및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의 대북 밀가루 지원 등이 일부 반영되어 소폭 상승
- 하지만 5.24조치로 인한 민간의 남북교역 제한으로 남북교역액은 전분기 대비 18.2% 감소

< 2006~2011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은 지난 분기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음

- 특히 중도 및 진보 성향의 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모두 보수 성향의 지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이는 유연성을 강조한 류우익 장관의 취임(9. 19)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이 없는 데 대한 실망감이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정부의 조문 제한과 북한의 반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다만 다음분기 기대지수는 현재의 전문가 평가지수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음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1. 4분기	37.0 (▽2.5)	44.9 (▽5.7)	27.6 (▽12.3)	39.7 (▽12.0)	32.1 (▽5.2)	38.1 (▽12.3)	31.9 (▽8.1)	36.5 (▽2.5)	40.7 (▽10.3)
'11. 3분기	39.5 (▲11.5)	50.6 (▲11.2)	39.9 (▲23.1)	51.7 (▲23.4)	37.3 (▲14.6)	50.4 (▲13.8)	40.0 (▲18.2)	39.0 (▲10.0)	51.0 (▲16.3)
'11. 2분기	28.0 (▽1.9)	39.4 (▽4.2)	16.8 (▽16.2)	28.3 (▽18.8)	22.7 (▽3.5)	36.6 (▽0.7)	21.8 (▽9.3)	29.0 (▽7.2)	34.7 (▽9.9)
'11. 1분기	29.9 (▲15.5)	43.6 (▲11.3)	33.0 (▲8.8)	47.1 (▲5.6)	26.2 (▲15.8)	37.3 (▲2.0)	31.1 (▲15.6)	36.2 (▲11.2)	44.6 (▲8.1)
'10 4분기	14.4 (▽19.2)	32.3 (▽14.4)	24.2 (▽6.1)	41.5 (▲0.7)	10.4 (▽19.0)	35.3 (▽3.4)	15.5 (▽14.9)	25.0 (▽5.1)	36.5 (▽5.5)
'10 3분기	33.6 (▲20.6)	46.7 (▲15.7)	30.3 (▲20.8)	40.8 (▲18.4)	29.4 (▲18.6)	38.7 (▲9.3)	30.4 (▲19.5)	30.1 (▲7.5)	42.0 (▲15.4)
'10 2분기	13.0 (▽6.0)	31.0 (▽0.3)	9.5 (▽4.5)	22.4 (▽8.2)	10.8 (▽5.0)	29.4 (▲0.6)	10.9 (▽5.6)	22.6 (▽7.3)	26.6 (▽3.8)
'10. 1분기	19.0 (▽20.7)	31.3 (▽20.1)	15.0 (▽15.5)	30.6 (▽24.0)	15.8 (▽13.9)	28.8 (▽20.0)	16.5 (▽17.0)	29.9 (▽11.1)	30.4 (▽20.4)
'09. 4분기	39.7	51.4	30.5	54.6	29.7	46.8	33.5	41.0	50.8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yhlee@hri.co.kr, 02-2072-6222)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2-2072-6221)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 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융자액의 합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2년 2월 1일 ~ 8일(일반인) / 2012년 1월 31일~2월 10일(전문가)
- 조사방법 : 전화조사(일반인), 설문지조사(전문가)
- 조사 대상 :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남녀 1,002명
연구원, 교수 등 북한관련 전문가 72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2. 조사 내용

□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망

1. 정치·군사 관계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0.8	7.5
2. 그렇지 않다	48.6	42.5
3. 보통이다	29.2	40.0
4. 그렇다	0	10.0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5	8.8
2. 그렇지 않다	47.2	43.8
3. 보통이다	36.1	37.5
4. 그렇다	2.8	10.0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6	5.0
2. 그렇지 않다	47.2	37.5
3. 보통이다	33.3	37.5
4. 그렇다	12.5	18.8
5. 매우 그렇다	1.4	1.3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8	3.8
2. 그렇지 않다	29.2	20.0
3. 보통이다	31.9	43.8
4. 그렇다	33.3	32.5
5. 매우 그렇다	2.8	0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3.9	7.5
2. 그렇지 않다	58.3	37.5
3. 보통이다	26.4	46.3
4. 그렇다	0	8.8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8	2.5
2. 그렇지 않다	54.2	21.3
3. 보통이다	31.9	45.0
4. 그렇다	9.7	31.3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2. 경제적 관계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5	6.3
2. 그렇지 않다	54.2	42.5
3. 보통이다	27.8	40.0
4. 그렇다	4.2	11.3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2	1.3
2. 그렇지 않다	15.3	18.8
3. 보통이다	41.7	32.5
4. 그렇다	31.9	41.3
5. 매우 그렇다	6.9	6.3
계	100.0	100.0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8	5.0
2. 그렇지 않다	52.8	37.5
3. 보통이다	36.1	41.3
4. 그렇다	8.3	16.3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8	7.5
2. 그렇지 않다	47.9	41.3
3. 보통이다	38.0	40.0
4. 그렇다	9.9	11.3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5	3.8
2. 그렇지 않다	54.2	52.5
3. 보통이다	30.6	38.8
4. 그렇다	1.4	5.0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2	5.0
2. 그렇지 않다	44.4	26.3
3. 보통이다	34.7	35.0
4. 그렇다	15.3	33.8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1	10.1
2. 그렇지 않다	56.9	40.5
3. 보통이다	23.6	32.9
4. 그렇다	6.9	13.9
5. 매우 그렇다	1.4	2.5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1	17.7
2. 그렇지 않다	52.8	44.3
3. 보통이다	31.9	34.2
4. 그렇다	2.8	3.8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1	8.9
2. 그렇지 않다	36.1	34.2
3. 보통이다	38.9	48.1
4. 그렇다	12.5	8.9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1	10.1
2. 그렇지 않다	51.4	32.9
3. 보통이다	31.9	46.8
4. 그렇다	4.2	10.1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8	3.8
2. 그렇지 않다	38.9	19.0
3. 보통이다	36.1	38.0
4. 그렇다	20.8	39.2
5. 매우 그렇다	1.4	0
계	100.0	100.0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2.8	1.8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5	0.8	0.2	0.2	-0.3	-0.5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1.7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2월 24일	3월 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98	2.03	0.05%p
	엔/달러	81.19	80.66	77.66	80.00	80.51	0.51 ¥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372	1.3460	0.0088\$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983	12,980	-3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647	9,707	6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45	3.45	0.00%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25.8	1,118.7	-7.1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2,019.9	2,030.3	10.4p

주: 3월 1일 국내지표는 전일(2월29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2월 24일	3월 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109.58	109.36	-0.22\$
	Dubai	88.80	106.75	104.89	121.57	119.64	-1.93\$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25.91	324.32	-1.5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2	4.2	3.4	3.5	3.4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